

#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시민안전 위협한다

### 도로 승하차 원인...교통사고 위험·상승 정체 발생 광주 최근 5년 1만8181건 적발 “단속·인식 개선을”

광주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해 승객들이 차도로 내려가 탑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까지 커지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운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버스정류장(백운교차로 방향) 일대에는 황색실선 구간임에도 차량과 오토바이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운림50번·진월77번 시내버스는 정류

장 앞 차선을 점유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주행 차선에 멈춰 승객을 태워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추월했고, 반대편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씨(30)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려고 차도로 나가는 일이 많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면 정차 시민 안전 관리에는 소홀한 것 같다. 버스 정류장만큼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버스정류장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버스 승객이 도로에서 하차하고 있다.

같은 날 서구 양동복개소점센터 버스정류장(천교 방향)과 북구 말바우시장(동) 버스정류장(동강대 방향)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정류장 인근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어졌고 종이박스나 스티로폼 등 생활쓰레기까지 적치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줬다.

버스가 정류장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차도 가장자리로 나와 승하차해야 했고, 뒤따르던 버스들도 도로 위에 연이어 정차하면서 일대 교통 흐름이 막히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 정류장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함께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정류장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만81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30건, 2022년 3903건, 2023년 3583건, 2024년 3830건, 2025년 383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분기(1~3월)에만 1178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버스 정류장 주변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라며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과 교통질서 준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맑음 05:43 달맞이 18:04  
☁️ 맑음 19:17 달맞이 04:33



광주	☀️	8~21
목포	☀️	9~19
여수	☀️	10~19
순천	☀️	9~21
구례	☀️	8~21
광주	☀️	7~20
신도	☀️	10~20
흑산도	☀️	11~16
진남	☀️	9~20
진도	☀️	10~18

목포	밀물(고)	01:20 / 18:29
	썰물(저)	06:35 / 18:46
여수	밀물(고)	08:15 / 20:45
	썰물(저)	02:08 / 14:13

###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체불금 10억 채권 일당 3년6개월 선고

국비로 지급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금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4년이 선고된 A씨와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전남 영암 등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임금 체불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10억여원이 넘는 정부 대지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신 행복잔치. 가정의 달을 앞두고 29일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동원사가 열어나가는 어린신 행복잔치를 찾은 지역 어린이 300여명이 따뜻한 공양과 문화공연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원사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가정의 달을 맞아 자비산행회,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어린신 행복잔치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과 경료친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마트 등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공사 현장에서 일한 뒤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실제 일하고 임금을 모두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허위 신고했다.

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조사를 시작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대지급금을 신청해 이를 자신들이 받아 챙겼다.

이들은 근로자 대표가 임금체불 진정을 철회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노려 이런 변형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각 범행은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지급금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국가기관을 기만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선거철 ‘광주 서구민의 날’ 행사 이유는?

### 동구·남구, 단체장 부재로 취소...서구는 강행 김이강 청장 현직 유지 영향...선관위 검토 받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자치구들이 잇따라 ‘구민의 날’ 행사를 접고 있는 가운데, 서구만 출로 기념식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구와 남구는 “선거 오해 소지가 있다”며 일찌감치 행사 취소 카드를 꺼냈지만, 서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구민의 날은 동구·서구 5월1일, 남구 4월 20일, 북구 9월26일, 광산구 10월1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동구와 남구는 행사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서구는 오는 5월7일 청사 들불을

에서 ‘제32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을 그대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서구민상 수상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전 공연부터 축사, 시상식, 합창 공연까지 통상적인 기념식 형태로 꾸러진다.

특히 서구는 선거관리위원회 검토까지 거쳐 “행사 진행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이강 청장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택 동

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어 상태다.

동구와 남구는 “괜한 선거법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동구는 예정됐던 동구민상 발표까지 미뤘고, 남구는 이에 관련 조례 손질에 들어갔다.

남구는 구민상 시상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사실상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의미다.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나가는 상황에선 행사 자체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서구처럼 선관위 판단까지 받은 만큼 형식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영산강·섬진강유역 통합 물관리 재구조화 포럼

## “기후위기 대응...물 관리 현대화 시스템 구축 시급”

### 윤광식 분과장 “데이터센터 등 수자원 인프라 부족” 정재성 교수, 분산형시스템 도입·폐수 처리 등 강조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물 배분 정책 만으로는 기온과 홍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설 현대화와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

기 시대 거버넌스: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물관리 재구조화 포럼’을 열고 유역 단위 물 관리 체계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광식 정책분과장은 영산강 수질과 물순환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윤 분과장은 “영산강·섬진강의 생활화학물질산소요구량(BOD) 달성률이 2025년 기준 18.2%에 그쳐 한강(89.6%), 낙

동강(78%), 금강(82.8%)에 비해 크게 낮다”며 “수질 개선과 재해 대응을 위한 신규 수자원 시설 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래 산업 변화에 비해 수자원 인프라 구축이 뒤처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분과장은 “광역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 계획은 추진되면서도 데이터센터나 RE100 산업에 필요한 물 인프라 구축은 미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물 관리 체계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산강 하구의 염산호·영암호를 사례로 들며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태계 보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수변공원과 다목적 저류지 조성, 용수 연계 확대 등 공급 체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 분과장은 해의 사례를 통한 정책 방향도 제안했다. 그는 “호주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로 계획과 원적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고, 일본은 수리시설 현대화와 능지 저류 기능을 강화했다”며 “유역 중심의 통합 물 관리와 디지털 기반 물순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섬진강 유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섬진강은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기온과 홍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하천 유지유량 부족과 노후 제방, 배수시설 문제 등으로 재해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여수·광양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공업용수 사용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기후변화로 주암댐 등 기존 수자원 공급 능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 수요 예측을 넘어 공급 우선순위 설정과 단계별 대응 계획을 포

함한 물배분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빗물 저장과 하수 재이용을 의무화하거나 지원되는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영산강 유역은 생활·공업용수의 상당 부분을 섬진강에 의존하는 구조로 자립도가 낮다”며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폐수를 고도 처리해 재사용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수질 개선과 물 이용 갈등, 홍수·가뭄 대응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유역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